

선생님을 지켜야  
학교가 삽니다!



모두가 안전한 학교



아이들이 행복한 학교



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

# 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(2026.6.3.) 교육감선거  
한국교총 제안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세부과제

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

# 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

## 목차 CONTENTS



### 01 모든 아이에게 닿는 미래 교실 04 한국형 AI 교육플랫폼 구축

- ✔ 국가 주도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AI 교육플랫폼 구축
- 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AI 교육환경 조성
- ✔ 학생별 맞춤 AI 학습 환경 구축
- ✔ AI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AI 활용 기반 마련

### 02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05 전 학생 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보장

- ✔ 전 학생 학력 진단을 통한 학습결손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
- ✔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
- 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급 편성 기준 하향 및 개별 지도 환경 조성
- 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강화

### 03 자율과 다양성, 학교에서 시작된다! 06 현장 중심 교육 혁신

- ✔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학교 자율성 확대
- ✔ 교육청 목적사업 축소 및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
- ✔ 지역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경쟁력 강화

### 04 차별 없는 출발, 모두를 위한 교실 07 공교육의 포용적 공공성 강화

- ✔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, 학급당 유아 수 감축
- ✔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
- ✔ 다문화학생 및 밀집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강화
- ✔ 학생의 삶과 직결된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

### 05 교육청이 함께 지키는 아이들의 일상 08 건강한 교실과 안전한 학교 구축

- ✔ 정서·행동 위기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 및 상담 강화
- ✔ 학교전담경찰관(SPO) 배치 및 학폭 업무와 교내 범죄·안전 관련 업무 통합 수행
- ✔ 학생과 교사,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
- ✔ 급식·돌봄 파업 공백 방지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

### 06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! 09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안전망 설계

- 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'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' 전면 도입
- ✔ 무고성 신고에 대한 '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' 추진
- 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(폭행·상해·성폭력 등)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
- ✔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

### 07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10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

- ✔ 초등교과 전문성 향상, 교과전담교사 확대
- ✔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, 동아리 지원 및 학습연구년제 확대
- ✔ 수업의 달인 '수석교사' 선발 확대
- ✔ 공·사립학교 간 인사교류 활성화

### 08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에게만! 10 행정은 교육청으로, 교육 본질 회복 노력

- ✔ 시설·인력 관리 등 교육활동 외 행정업무 학교 외부 이관
- ✔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행정지원대책 마련

### 09 현장의 목소리가 진짜 교육 정책입니다! 11 교육 정책의 현장 대표성 강화

- ✔ 국민 누구나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,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
- ✔ 현장 중심 교육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교원단체 정책 참여 보장

# 01 모든 아이에게 닿는 미래 교실

## 한국형 AI 교육플랫폼 구축



- ✔ 국가 주도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AI 교육플랫폼 구축**
  - 학습이력 관리, 수업자료 공유, AI 활용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학습허브 구축
  - AI 튜터·보조교사 기능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 특화된 교수·학습 지원 체계 구현
  - 한국 교육과정에 맞는 AI 모델 적용 및 학생 데이터 국내 안전 관리
- 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AI 교육환경 조성**
  - AI 활용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
  -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·평가 설계·맞춤형 피드백 등 수업역량 지원
  - AI 활용을 통한 반복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✔ 학생별 맞춤 AI 학습 환경 구축**
  - 공교육 AI 학습플랫폼을 통해 학생 수준과 학습 속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
  -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 대상 기기와 네트워크 우선 지원으로 AI 격차 완화
  - AI 활용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AI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
- ✔ AI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AI 활용 기반 마련**
  - AI 활용 능력·작동 원리와 한계 이해·생성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·사회적 영향 인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터러시 교육 강화(학부모 AI 리터러시 정례 교육 포함)
  - 개인정보·저작권·공정성·투명성 등 현장 쟁점에 대응하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

# 02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

## 전 학생 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보장



- ✔ 전 학생 학력 진단을 통한 학습결손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**
  - 모든 학생 대상 연 1~2회 학력 진단 의무화
  - 초·중·고 전 과정에서 학습이력 통합 관리·열람 시스템 운영
  - 개별화 수업을 담당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대폭 확충
- ✔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**
  - 학생별 진로·적성 진단과 상담 지원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 구축
  - 분야별 재능과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심화학습·영재교육 기회 확대
  - 다문화·특수교육·느린학습자 등 모든 학습자가 존중받는 학교 환경 조성
- 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급 편성 기준 하향 및 개별 지도 환경 조성**
  - 초등 저학년 우선 학급당 학생 수 대폭 하향 조정
  -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시간 확보를 통해 개별 밀착지도 환경 조성
  - 개별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공간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안심 휴식 공간 조성
- 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강화**
  -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순회 교사 및 행정인력 확대
  -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통학버스 등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
  - 우수인력의 안정적 근무 유도를 위해 농어촌 근무교원의 정주여건 개선

# 03 자율과 다양성, 학교에서 시작된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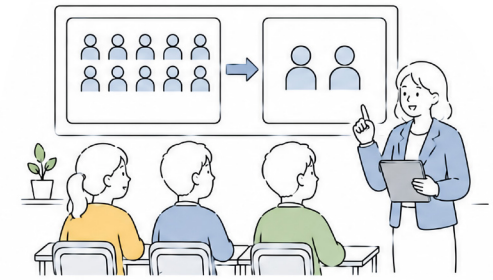
## 현장 중심 교육 혁신



- ✓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학교 자율성 확대**
  - 학교가 지역·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·시간운영·과목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 확대
  - 획일적 지침·공문 중심 사업 운영을 정비하여, 사전 통제형 관리에서 자율·책임 기반 운영체제로 전환
  -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이관 및 지원체계 강화
- ✓ 교육청 목적사업 축소 및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**
  - 목적 지정 사업을 축소하고, 학교가 교육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예산 배정 확대
  - 표준교육비를 현실화하고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학교 단위 재정 자율성 실질 보장
- ✓ 지역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경쟁력 강화**
  - 지역 전략산업(반도체·바이오·관광 등)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개편 지원
  -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, 현장실습·인턴십·채용 경로 체계화
  -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시설·기자재 현대화 및 실습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고도화

# 04 차별 없는 출발, 모두를 위한 교실

## 공교육의 포용적 공공성 강화



- ✓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, 학급당 유아 수 감축**
  -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·확충
  -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여 교사 지도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제고
- ✓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**
  - 시·도별로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최소 1개교 이상 설립
  - 유·초등 1~4인 이하 1학급, 중·고교 1~6인 이하 1학급으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
- ✓ 다문화학생 및 밀집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강화**
  - 이중언어강사의 배치 확대 및 역할 전문화
  - 교육(지원)청 중심의 다문화학생 학부모 대상 한국교육체제 이해 교육 실시
- ✓ 학생의 삶과 직결된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**
  - 소비·저축·투자 등 생활 속 활동 연계 경제교육 강화(용돈 관리, 벼룩시장 개최 등)
  - 사이버 도박, 금융위험 예방 교육 등 시대에 적합한 금융교육 확대

# 05 교육청이 함께 지키는 아이들의 일상

건강한 교실과 안전한 학교 구축



- ✔ **정서·행동 위기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 및 상담 강화**
  -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 마련
  - 위기 학생 파악·연계·지원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·Wee센터 기능 강화
  -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표준 학칙안 마련·제시
- ✔ **학교전담경찰관(SPO) 배치 및 학폭 업무와 교내 범죄·안전 관련 업무 통합 수행**
  - 1학교-1전담 경찰관 단계적 추진을 통해 안전한 학교-범죄 없는 학교 기반 마련
- ✔ **학생과 교사,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**
  - 현장체험학습의 실시 여부와 방식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
  - 고의·중과실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민·형사상 면책기준 법제화
  - 차량·숙소·체험장소 점검, 안전요원 배치 등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
- ✔ **급식·돌봄 파업 공백 방지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**

# 06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!

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안전망 설계



- ✔ **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'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' 전면 도입**
  -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·교육청이 소송 진행 또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
  -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 및 인력 확대
  - 전담조사관제 마련을 통한 정확한 사실조사 및 증거 확보
- ✔ **무고성 신고에 대한 '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' 추진**
  -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직접·신속 조사
  -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판명될 경우 무관용 고발 조치
- ✔ **중대한 교육활동 침해(폭행·상해·성폭력 등)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**
  -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 제고 및 피해 교사에 대한 공적 보호 강화
- ✔ **교육지원청 단위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**
  - 각종 민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1차 대응하여 학교는 교육에 집중

# 07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

##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



- ✔ **초등교과 전문성 향상, 교과전담교사 확대**  
- 교과별 특화된 지식·교수법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대를 통해 수업의 질 향상
- ✔ **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, 동아리 지원 및 학습연구년제 확대**  
- 자기주도적 연구와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수업의 변화 유도
- ✔ **수업의 달인 '수석교사' 선발 확대**  
- 교수·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의 교사 선발 확대 및 유인책 강화
- ✔ **공·사립학교 간 인사교류 활성화**  
- 공·사립 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풍부한 경험 공유 및 교육재정 낭비 해소

# 08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에게만!

## 행정은 교육청으로, 교육 본질 회복 노력

- ✔ **시설·인력 관리 등 교육활동 외 행정업무 학교 외부 이관**  
- 학교 시설의 개방, 유지·보수, 안전 점검 등 전문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 신설  
- 보건교사의 학생건강관리 집중을 위해 환경위생시설관리 업무 지원
- ✔ **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행정지원대책 마련**  
-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재설계  
- 교사가 상담과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 및 유관 기관 협력 업무를 뒷받침하는 지원 시스템 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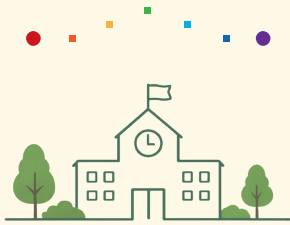
# 09 현장의 목소리가 진짜 교육 정책입니다!

## 교육 정책의 현장 대표성 강화



- ✔ **국민 누구나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,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**  
-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되,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균형 있는 제도 마련  
- 정치·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왜곡을 방지하고, 교육 전문가로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과 정책 제안 참여권 보장
- ✔ **현장 중심 교육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교원단체 정책 참여 보장**  
- 정책 수립 전 현장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, 부담 유발 정책은 사전 검증 후 도입  
- 교육청-교원단체 간 상설 정책협의기구 운영으로 주요 현안 사전 조율 체계 마련  
- 교원단체 파견을 통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교원 보호 기능 강화





## 모든 아이에게 닿는 미래 교육

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,  
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  
한국교총이 함께합니다.

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

(06764)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(우면동 142) | T. 02-570-5722 | F. 02-3461-0434

[www.kfta.or.kr](http://www.kfta.or.kr)